



검찰 수사 급물살

상품권업체 19곳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4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된 19개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이들 19개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법원이 이 회사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검은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의 실체가 배일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버스 19대·230여명 동원

검찰은 이날 관광버스 10대 등 모두 19대의 버스를 동원해 서울과 성남에 분포한 상품권 발행업체 19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곳에 버스 1대가 움직인 셈이다. 이날 오전 19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수사관 230여명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충분하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업체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갔거나 부정적인 청탁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로비·돈 흐름 확보에 주력

검찰은 압수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돈 흐름은 없었는지 낱낱이 살피는 한편 직원들의 e-메일을 압수해 상

품권 발행자격을 얻기 위해 로비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따라서 검찰은 “자료를 검토해 19개사 모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영장이 나왔겠느냐”며 향후 수사에서 모종의 성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폭 연계 가능성도 수사

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는 자금력이 충분하고 경영 상태가 검증된 회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여럿 포함된 탓에 로비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사업에 뛰어든 뒤 당기순이익이 수십억씩 늘어나면서 ‘대박’을 터트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에 검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

상품권 유통에 폭력조직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조준권에 들어와 있다. 상품권은 유통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 유통 과정의 이권을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폭들이 1만5천여개 오락실의 상품권 환전 등 유통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행성 오락게임기 비리 의혹과 관련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24일 저녁 해피머니이연씨종로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對국민사과부터” “진상규명부터” 당-청관계 또 깨지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당이 사태 해결책으로 제기한 정부책임론과 대국민사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선진 상규명, 후 사과’라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저녁 소집된 여권수뇌부 회동에서도 당청은 대국민 사과 여부 등 향후 대응 수순과 수위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국민사과를 할 경우 참여정부가 법률적 책임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책임까지 떠안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내 친노(親盧)그룹들도 이 같은 관점에서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구는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동의할 수 없다”며 “먼저 책임소재를 가린 뒤 정말 사과가 필요하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게 봉합한 당청관계가 바다이야기

기 해법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김한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관리에 실패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 책임도 크다”며 수위조정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임 범위에 대해 “정부의 정책집행을 제대로 감시 못하고 도박성 게임을 제어하는 법안을 잠재워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의 공동책임론을 일장 부분 수용하면서 국회와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핵심당직자도 “날마다 요구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대국민사과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당장 대국민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를 압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우리당은 이날 ‘사행성산업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 청와대 민정파트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위기에 즉시 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돈 뜯어간 공무원과 자폭”

게임장업주들 “생존권 수호 위해 법적대응”

정부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폐기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등 성인게임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게임장 업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게임장 업주 모임인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23~24일 충북 보은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전국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책실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업계에 떠넘기려는 정부에 맞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42) 회장은 “정부가 등급을 분류해 심의필증까지 붙인 게임기를 사들여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했는데 닥달없이 심의 문제를 들어 이를 몰수한다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정부의 마녀사냥식 대응에 맞서 전국 1만5천개 업소에 종사하는 30만명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정부 투쟁과 함께 국민적 반감해소를 위한 강도높은 자정활동도 펼쳐진다. 이 단체는 그동안 시·도 지회단위로 펼친 자정 프

그램 참여율이 20~30%대에 머문 만큼 강력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불참업소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성인오락실 업주의 글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자신을 성인오락실 업주라고 소개한 김모씨가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글이 업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김씨는 이 글에서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출시된 게임기들이 대부분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돌리고 있다”고 정부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 발표와 몰수 검토 계획이 공개된 뒤 평균 500만원대였던 게임기 중고 시세가 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전국 1만5천개 업소가 50대씩만 갖고 있다고 치면 3조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김씨는 “못믿을 정부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며 지금까지 우리 돈을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해 버리자”고 위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선 “당직 사퇴” 정동채의원 책임론 확산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상품권 인증제 도입 및 지정제 전환 등을 시행한 정동채 의원(광주 서 울)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인 정동채 의원의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23일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정책실화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 것을 계기로 정동채 의원의 당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모 라디오 방송사

와의 인터뷰에서 “정동채 의원의 장관 책임 시절 사행성 게임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동채 의원은 장관 재직시 사행성 게임이 번져나갔던 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 논란과 관련, 문화관광부 장관 책임 당시 성인게임 및 경품용 상품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상품권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주성영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가 된 상품권 및 게임기 관련 주무장관이었던 정 전 장관

은 그 책임을 몽땅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만 떠넘기고 있다”며 “당시 정동채 장관이 인증이 취소된 22개 상품권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체로 지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복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의원은 아직까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어느 정도 상황 진행을 보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채 의원 핵심 측근은 “이 같은 상황에서 뒤라고 얘기하겠느냐”며 “공식 입장은 ‘말 할 없음’이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품권 소비자 피해 없을 것”

서울보증보험 “담보보증금 총분”

서울보증보험은 24일 경품용 상품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랑으로

다 커진 해피, 다 커진 행복!
‘사랑으로’ 부영 3차 임대분양!

26억 2천만원부터 시작
전세대출 지원 100% 보장

26억 2천만원

‘사랑으로’ 부영 3차

2006년 9월 입주예정!

062-368-8322

주 부 영